

#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이 국민의 이사의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 태 형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이 국민의 이사의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교통 요인이 이사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안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출을 통한 인구늘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량과 정책수단을 활용했을 때 지역주민의 이사의의향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여부 또는 기혼이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기혼일 때 혹은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이사의의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이동하고 싶은 지역의 흡입요인은 국민의 이사의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경험한 국민일수록 이사의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기혼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지방정부가 정책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정책홍보와 정책수단의 활용에 따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정부 역량, 정책수단, 이사의의향, 인구, 정책홍보

## I. 서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경쟁적으로 정책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장려금, 전입지원금과 같은 재원형 정책수단이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끼리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1월 1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20

\* 이 논문은 김태형의 박사학위논문(2020)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는 양미선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저출산정책을 현금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이유(1+2순위)에 대해 지역주민의 선호도나 요구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85.7%로 나타났고, 사업시행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5.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산단계에서 순수 자체 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1+2+3순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산육아 비용 부담 완화가 82.9%,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가 55.6% 순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34).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81.1%의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응답이 70.7%, 지자체 주민간 형평성 문제가 66.9%,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52.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는 이유와 지역주민이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장의 재량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8%의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36).

이처럼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조사가 수행된 반면, 정책수혜자의 입장인 일반 국민의 의견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지역주민의 이사의향을 낮추어 거주 의사를 지속시키는지, 아니면 이사의향을 높이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지방정부간 과도한 현금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수혜자인 국민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 범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일 정책수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자가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이사의향을 탐색하거나(손웅비·장재민, 2018) 해당 지역의 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의뢰한 경우는 있으나, 포괄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혼인 여부나 자녀의 유무에 따라 정책수요나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수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더라도 지역 주민이 가진 특성에 따라 해당 정책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관심 외적인 영역이라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의향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 요인과 교통 요인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라벌·성욱준(2019)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이 이주의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지 보행 이동에 대한 만족도 등의 요인이 이주의향을 낮추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주요건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요인이나 지방정부의 역량 요인 등이 이사의향을 낮추는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그

에 따른 실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요인과 교통 요인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배출 요인과 흡입요인에 비추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된 내용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거주민의 이사의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특성별로 어떠한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책수단의 활용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검토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평가와 지방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 정책수단의 확대에 대한 인식, 정책홍보물의 경험 유무,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의 정주환경 등이 국민의 이사의향에 배출요인과 배출억제요인, 그리고 흡입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에 대한 고민에 앞서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인구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민간 부문을 탐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성락, 2012: 140).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티부 가설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에 따라 발에 의한 투표에 의해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구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를 가정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재의 수준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자발적인 이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이 시장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Tiebout, 1956). Hirschman(1970)이 제시한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은 이탈(exit)과 항의(voice), 충성(loyalty), 더 나아가서는 태만(Neglect)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Hirschman이 설명하는 이탈(exit)의 개념은 Tiebout가 설명하는 발에 의한 투표에 해당하고, 이는 주민이 공공서비스나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이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고 이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공재에 대한 선택과 이동 혹은 이탈(exit)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이탈(exit) 뿐만이 아니라 항의(voice)를 통해 공공재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irschman, 1970).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교통 및 지리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배경과 더불어 해외와 달리 세금과 같은 요인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경쟁이 낮은 편이고, 최근에서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수단 활용에 따른 경쟁이 나타나고 있

다는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배출요인

배출요인(push)은 이주자의 내부 심리에서 이주 욕구를 자극하여 이주를 하게끔 하는 이주동기요인을 의미한다. Phy et al.(1989)은 이주 동기와 목적지 속성 간 연관성의 특성과 수준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주 동기와 배출요인들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희찬(2009)의 연구에서는 정착자금 지원효과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농촌이주 결정요인과 농촌정착자금의 지원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도시의 배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이 인구이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도시인구를 농촌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활용 유무와 활용 강도 등이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정책변수가 농촌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희찬, 2009: 99).

한편, 이희찬(2009)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취업요인과 부정적 환경요인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흡입요인 중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농업·농촌 경험 등은 이주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도시의 배출요인이 농촌의 흡입요인에 비해 다소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농촌이주의 동기를 농촌의 흡입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촌이주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용(2009)의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은 주민일수록 현재 거주지를 이탈(exit)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탈(exit)을 자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서용, 2009: 159-160). 뿐만 아니라 사전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탈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Withey & Cooper(1989)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신윤창·안치순, 2009: 196). 이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비전과 전략, 목표와 수단 등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정책역량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지역주민의 정책 수용성에 매개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윤창·안치순, 2009: 208-209). 이 외에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출산장려금, 할당 정책 등의 공공서비스 요인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김성태·장정호, 1997; 석호원, 2012; 최성락, 2012; 홍성효·유수영, 2012; 송헌재·김현아, 2014; 이연경, 2018).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배출요인이자 배출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정부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이사의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1-1을 설정하였다.

한편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민감한 여성 그룹의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송헌재·김현아, 2014)와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과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및 기타 출산장려 지원이 출생아수 증감과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최분희, 2015). 문소영(2018)의 연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 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활용이 배출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1-2와 정책수단의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3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낮을 것이다.

가설 1-3. 정책수단의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높을 것이다.

## 2. 흡입요인

흡입요인(pull)은 이주자들을 특정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요인으로 목적지에 존재하는 매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Smith(1983)는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특성이 유형자원이거나 이주자의 인식 또는 기대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Bello & Etzel(1985)은 흡입요인이 목적지로 유인하는 매력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설명하고 해당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지역의 흡입요인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의 조세와 공공지출이 고령인구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티부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고, 지방세 부담액과 지가의 상승이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석호원, 2012).

뿐만 아니라 안락한 정주여건의 측면에서 교육, 교통, 문화향유의 기회 등이 인구이동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연구 결과(이재중, 2002; 정성호, 2008; 홍성효·유수영, 2012; 김리영·양광식, 2013)와 주택 확보와 거주비용, 그리고 지가 상승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연구(김성태·장정호, 1997; 문태훈, 2011; 석호원, 2012; 진장익 외, 2013), 그리고 지역산업의 발전 수준이나 일자리, 기대소득의 요인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김경수·임하경, 2011; 김광식·박현신, 2007; 김리영·양광식, 2013; 이기배, 2013; 홍성효·유수영, 2012).

마지막으로 농촌이주를 촉진시키는 핵심 요인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지원금과 소득기회의 창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이희찬, 2009: 108). 이희찬·김현(2006)의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이주 의향이 높은 집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농촌기반 유인, 농촌자연 유인, 농촌 경험유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주의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흡

입요인이 도시의 배출요인에 비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배출요인 보다는 농촌의 흡입요인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이희찬·김현, 2006: 146).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하고 싶은 지역의 교통망, 문화시설, 교육환경, 일자리, 정부지원 등의 흡입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사의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1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을 통해 이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가설 2-1. 이동하고 싶은 지역의 흡입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높을 것이다.

〈표 1〉 이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

저자(연도)	배출요인	흡입요인
Roseman(1981)	조기퇴직, 실직(도시)	쾌적한 환경 추구, 대안문화 추구(농촌)
Bello & Etzel(1985)	도시를 떠나게 하는 요인	목적지로 유인하는 매력도의 결과로 해당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요인
Owen & Green (1992)	도시의 주택가격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서의 농촌에 대한 인식
Massey et al. (1993)	가난, 낮은 삶의 기준, 높은 실업률	높은 임금, 높은 삶의 기준,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국제 이주)
서규선·박덕병 (1997)	도시의 소음, 공기 오염, 오염된 식수, 높은 범죄율, 물가, 주택문제, 스트레스	농촌의 맑은 공기, 낮은 범죄율, 전원생활, 생활여건, 영농기계화·과학화
이희찬(2009)	취업요인, 부정적 환경요인	정착지원금
이희찬·김현 (2006)	도시환경 추진(교통체증, 높은 범죄율, 높은 물가, 소음과 공해, 주택난, 직장생활 스트레스), 취업환경 추진(취업난, 실직/퇴직 및 사업실패)	농촌기반 유인(영농을 위한 토지 임대, 노동생산성 향상, 귀농자의 귀농성공사례, 농촌의 토지거래, 농어촌 학자금지원 및 대학특례입학, 집단농촌생활), 농촌자연유인

### 3. 정책홍보 경험

정책홍보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PR이 있는데, PR은 조직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마케팅 활동과 효율적인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요인이다(정혜선, 2001). 정책홍보의 개념은 앞에서 제시한 정책PR, 정부홍보, 행정PR 등의 개념과 유사성을 나타내는데, 1997년 한국홍보학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홍보와 PR의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홍보는 국민의 행동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쳐 특정한 정책 이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Gelders & Ihelen, 2010; 황창호 외, 2017 재인용). 또한 손호중(2007)은 정책홍보가 과거의 관보와 대중매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전자정부에 이르기까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ICPD)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이후로 인구정책에서는 규제나 강제와 같은 징벌적 요소가 정책수단으로서 매력을 상실하였고, 보상이나 교육 또는 홍보 등의 정책수단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전광희, 2018: 220).

본 연구에서는 정책홍보물에 대해 공공 캠페인, 온라인·오프라인 정책 정보제공 자료,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인식교육 자료,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정책대상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 게시, SNS를 통한 정책홍보 등 포괄적인 범위의 정책홍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캠페인은 공공정보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Weiss & Tschirhart, 1994). 즉, 공공캠페인은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으로 국민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Howlett & Ramesh, 2003).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책홍보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출산을 제고를 통한 자연인구 증가와 전입을 통한 인구유입, 기존 거주지의 정책 정보 제공을 통한 거주 의사를 제고시키는 등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 개별 지방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책홍보가 정부의 정책 집행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성과에 대한 정책홍보의 영향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정부는 정책성과와 운영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정부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숙·최선미, 2019: 211).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관의 SNS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홍보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이용 동기가 높을수록 홍보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SNS를 통한 홍보활동이 기관의 이미지와 자원개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대중과의 관계성 향상을 위해 SNS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김한나, 2012: 69).

뿐만 아니라 소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저출산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저출산 정책요인의 연관성 예측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연관규칙은 '홍보, 상담서비스'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상에서 홍보와 상담서비스 정책이 언급될 경우 저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77.1%로 나타났고, 홍보와 상담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문서에 비해 저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2.46배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송태민, 2016: 8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쳐 정부 정책집행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해내는 요인이자 국민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홍보가 중요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지방정부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입을 유도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목적을 가진 제도나 정책수단에 대해 홍보할 때, 개인의 수용성 수준과 이어나 출산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의 논리적 평가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정보의 순서나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가 심리적으로 이사의향이 있는 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Kahneman(2003)는 이를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접근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과 특정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orld Bank, 2015: 75-7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는 각 개인의 선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요인이 있고, 그 기준점(reference point)을 넘어서는 결과가 도출되면 이익(gain),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loss)로 느낀다는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9). 즉,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사의의향을 낮추고 높이는 요인이 정책홍보에 따른 정보제공이고, 해당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수단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개인의 심리적인 주관성에 의해 이것이 해당 지역에 거주함에 따른 이익으로 느껴질 때 이사의의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한 지역 맘카페의 게시글 내용을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 혜택이 마음에 들 때 지속적인 거주 의사를 표명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제공하는 전입 지원 혜택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이후 이사의의향이 높아졌음을 밝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물을 경험한 국민일수록 이사의의향이 낮을 것이다.

PR학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틀로는 상황이론(The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이 있다. 상황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중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대중이 가진 문제, 제약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추구하는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여기서 문제 인식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하고, 제약 인식은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본인이 처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관여도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 개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Grunig & Hunt, 1984).

이는 기혼자가 출산을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문제인식이나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미혼자의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울뿐더러 문제인식의 수준이나 관여도의 측면에서도 기혼자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즉,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이 가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심리적 반발효과만 도출하여 의도한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최지현·조삼섭, 2014: 51).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세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단일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대상을 특성별 차별적 접근방안을 간과함으로써 정책PR에 따른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오영희 외, 2006). 이는 성공적인 캠페인 수행을 위해 수용자의 특성이나 수요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이나 방법 및 유형, 제시형태 등의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신호창·홍주현, 2000). 이에 따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물의 경험이 이사의의향에 미치는 영



향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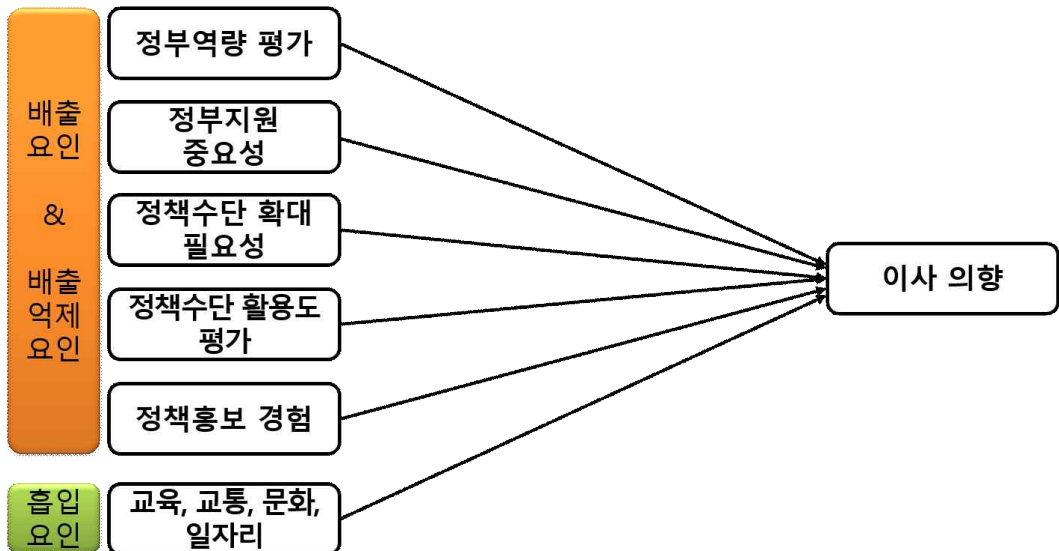
가설 3-2.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물 경험에 따른 이사의향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사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 정책수단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의 특성이 흡입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인구정책홍보 경험 유무가 인구이동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인 일반국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사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2019년 8월 20일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YUIRB: Yonsei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sup>1)</sup>

설문조사는 온라인 카페 중 부동산과 집을 목적으로 한 “아름다운 내집갓기”라는 카페와 출산 및 결혼, 육아, 인테리어, 생활전반 등을 주제로 한 “레몬테라스”, 출산 및 육아를 주제로 한 “맘스홀릭 베이비”에 설문조사 대상자를 모집하고, 구글 서베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sup>2)</sup> 세 카페는 모두 부동산과 집, 출산, 육아 정보 공유 측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카페로서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2019년 10월 9일부터 2019년 10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43개의 응답자료를 획득하였고, 이 중 387개의 응답자료를 표본수로 선정하였다.<sup>3)</sup> 즉, 총 응답수의 87.35%를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설문조사 진행 카페 리스트

No.	카페명	카페 목적	회원수
1	아름다운 내집갓기	부동산 정보공유 및 재테크	746,593
2	레몬테라스	결혼, 육아, 출산, 여성, 재테크, 생활전반 등	3,035,413
3	맘스홀릭 베이비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정보 공유	2,820,075

### 3. 표본의 특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0대는 12.4%, 30대는 가장 높은 비율인 68.48%를 차지하고 있고, 40대는 14.47%, 50대와 60대는 각각 3.62%, 1.0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 여성이 67.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32.3%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은 71.58%로, 기혼인 응답자 중 아이가 있는 사람이 239명으로 전체의 61.76%를 차지하고 있고, 미혼은 28.42%에 해당한다. 수도권 거주자가 48.06%에 해당하고, 강원도가 11.11%, 충청도가 12.66%, 경상도가 14.47%, 전라도가 10.85%,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2.84%를 차지하고 있다.

1) 2019년 10월 8일 IRB 승인을 받았고, 연구의 위험성은 Level 1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위험성에 해당하며,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번호는 “7001988-201910-HR-713-02”이다.

2) 행정학 박사수료자 5명과 일반 국민 10명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청취하고 또 다른 10명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후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동일한 번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응답이나 주관식 문항에서 요구하는 응답이 아닌 관련 없는 답변을 기재한 응답 자료 56건을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3〉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		빈도(명)	비율(%)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48	12.4	소득	300만원 미만	79	20.41	
	30대	265	68.48		301-400만원	93	24.03	
	40대	56	14.47		401-500만원	88	22.74	
	50대	14	3.62		501-600만원	58	14.99	
	60대	4	1.03		601-700만원	25	6.46	
성별	남성	125	32.3		701-800만원	14	3.62	
	여성	262	67.7		801만원 이상	30	7.75	
혼인	기혼	277	71.58		주택 소유 형태	월세	49	12.66
	기혼&자녀 없음	38	9.82			전세	144	37.21
	기혼&자녀 있음	239	61.76			자가	194	50.13
	미혼	110	28.42	수도권		186	48.06	
직업	직장인(사무/기술)	134	34.63	지역	서울	70	18.09	
	직장인(판매/ 서비스/생산/노무)	44	11.37		경기&인천	116	29.97	
	전문직/자유직	58	14.99		강원도	43	11.11	
	공무원	45	11.63		충청도	49	12.66	
	전업주부	53	13.70		경상도	56	14.47	
	자영업자	26	6.72		전라도	42	10.85	
	학생	16	4.13		제주도	11	2.84	
	무직	9	2.33					
	농림/어업/축산업	2	373					

## 4. 변수의 측정

### 1) 이사의향

본 연구에서는 이사의향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5년 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 여부를 문의하는 문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귀하는 향후 도시 또는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아직 모름’, ‘있음’, ‘매우 많음’의 보기를 제시한 것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통계청, 2018; 박대식 외, 2018). 선행연구에서 주로 이사의향이나 주거이동 의사를 ‘있다’, ‘없다’로 질문하거나(손웅비·장재민, 2018: 41; 임미화, 2019: 122), 주거실태조사자료와 같이 2년 안에 앞으로 이사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계획은 하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계획이 없다’라고 조사한 것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이사의향의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사의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 2) 배출 및 흡입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정책수단 활용에 대한 평가, 정책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해당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은 이유 등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이 이사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흡입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는가와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 활용이 배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배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 3) 인구통계학적 요인

결혼 여부는 배우자의 취업상태나 주거형태에 따른 이동의 제한이 높기 때문에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가 이동 경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권상철, 2005). 이에 따라 미혼인지 기혼인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이동성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동거 자녀수가 적을수록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자녀수를 파악하였다(이희연, 2008; 김동수 외, 2009).<sup>4)</sup>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월세나 전세에 비해 이동성향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주택소유 형태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최은영 외, 2010; 손용비·장재민, 2018). 또한 도시장년층의 은퇴 이후 농촌으로의 이주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소득수준과 농촌 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윤순덕 외, 2005),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 귀농·귀촌한 경우 노년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윤순덕 외, 2017). 반면에 이희찬(2009)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촌의 이주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이나 연령, 교육, 직업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이희찬, 2009).

〈표 4〉 측정변수 및 설문항목

측정변수		설문항목
종속	이사의향	·이사하고 싶은 마음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표시하십시오.
독립 변수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공무원 역량이 높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정책과정이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혁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형평성 있게 응대하고 있다.

4) 자녀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 목적에 따른 이사의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정재은·박천규, 2015) 자녀의 연령대를 조사하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나 파일럿 테스트 과정에서 자녀의 연령을 조사하는 것이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는 것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응답자의 의견에 따라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정부지원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정부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li> <li>·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할 때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i> <li>·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i> <li>·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할 때 정부가 전입세대에 지원하는 전입지원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i> </ul>	
정책수단 확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전입지원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전입지원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내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출산장려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ul>	
정책수단 활용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사는 지역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잘 하고 있다.</li> <li>·내가 사는 지역은 전입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입신고를 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잘 하고 있다.</li> <li>·내가 사는 지역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li> <li>·내가 사는 지역은 보건,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규제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을 잘 보호하고 있다.</li> <li>·내가 사는 지역은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잘 하고 있다.</li> </ul>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 (흡입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li> <li>·내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는 주택비용 때문이다.</li> <li>·내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는 교통망 때문이다.</li> <li>·내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는 교육 환경 때문이다.</li> <li>·내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는 문화시설 때문이다.</li> <li>·내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는 정부지원 때문이다.</li> </ul>	
정책홍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정책홍보물(온라인, 오프라인)을 본 적이 있다.</li> <li>·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전입지원금과 관련된 정책홍보물(온라인, 오프라인)을 본 적이 있다.</li> <li>·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홍보물(온라인, 오프라인)을 본 적이 있다.</li> </ul>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남성(1)/여성(0)
	연령	·연령
	혼인상태	·기혼(1)/미혼(0)
	자녀 수	·0명/1명/2명/3명/4명/5명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1)/301-400만원 미만(2)/401-500만원 미만(3)/501-600만원 미만(4)/601-700만원 미만(5)/701-800만원 미만(6)/801만원 이상(7)
	직업	·직장인(사무/기술직)(1)/직장인(판매/서비스/생산/노무직)(2)/전문직/자유직(교수/연구원/의사/법조인/언론인/예술인 등)(3)/공무원(4)/전업주부(5)/자영업자(6)/학생(7)/무직(8)/농업·임업·어업·축산업(9)/
	주택소유 형태	·월세(1)/전세(2)/자가(3)
거주 지역	·수도권/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제주도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내용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도

출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식으로는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일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역량과 정책수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사의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분석

다음의 <표 5>는 「지방정부 역량과 정책수단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이사하고 싶은 마음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외에 정책홍보물 경험 여부는 '있다', '없다'로 선택하게 하였고,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각각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사하고 싶은 마음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77.13점으로 나타났고 0점부터 100점까지 응답이 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교통망이 평균값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주택비용이 4.32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요인은 4.12, 교육환경이 3.97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이동을 발생시키는 흡입요인으로서 특정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시설이 3.6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다음 순으로는 교육환경(3.52), 교통망(3.41), 일자리(3.03), 주택비용(2.64), 정부지원(2.44)이다.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는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결과와 더불어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 결과를 파악하였다. 다음 순으로 출산장려금, 전입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후, 마지막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였다. 카페 가입자의 특성상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8.48%로 높게 나타났고, 40대가 14.47%, 20대가 12.4%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에 따른 비율은 여성이 67.7%, 남성이 32.3%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5) 최초 설문응답자 443명 중 표본에서 제외된 56명 중 약 90%에 해당하는 50명이 모두 남성에게 해당하였고, 출산장려금과 전입지원금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각각 더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표본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표 5〉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사의향	387	77.13	17.39	0	100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					
공무원 역량	387	2.75	1.05	1	5
효율성	387	2.76	0.95	1	5
청렴성	387	2.88	0.94	1	5
투명성	387	2.97	0.96	1	5
혁신성	387	2.84	1.01	1	5
신속성	387	2.95	1.03	1	5
형평성	387	3.01	0.97	1	5
정부지원의 중요성					
정부 지원	387	3.17	1.14	1	5
세금감면 혜택	387	3.26	1.15	1	5
출산장려금	387	2.98	1.32	1	5
전입지원금	387	3.15	1.22	1	5
정책수단 확대 필요성					
전입지원금 정책홍보 강화	383	3.86	1.13	1	5
전입지원금 확대 필요	382	3.39	1.26	1	5
출산장려금 정책홍보 강화	381	4.04	0.95	1	5
정책수단 활용도 평가					
경제적 규제 완화	387	1.53	1.62	0	5
사회적 규제 강화	387	2.11	1.67	0	5
세금감면 통한 기업 지원	387	1.07	1.59	0	5
구직활동 지원	387	2.06	1.74	0	5
전입지원금 지원	387	1.49	1.54	0	5
특정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은 이유(흡입요인)					
일자리	387	3.03	1.33	1	5
주택비용	387	2.64	1.18	1	5
교통망	387	3.41	1.31	1	5
교육환경	387	3.52	1.25	1	5
문화시설	387	3.60	1.26	1	5
정부 지원	387	2.44	1.16	1	5
정책홍보 경험					
출산장려금 정책홍보물 경험	380	0.45	0.50	0	1
전입지원금 정책홍보물 경험	383	0.22	0.42	0	1
인구정책 홍보 경험	387	0.43	0.50	0	1
개인 특성					
성별(여성)	387	0.67	0.46	0	1
연령	387	35.73	6.61	21	63
결혼 여부(기혼)	387	0.71	0.45	0	1
수도권 거주(더미)	387	0.48	0.50	0	1
월평균 가구소득	387	3.04	1.74	1	7

## 2. 탐색적 요인분석

다음으로 개별 설문문항이 측정지표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

연구의 한계 부분에 기술하였다.

해 SPSS 25.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공통성을 추출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요인 회전 방식은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일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고유치가 1.0 이상이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pm 0.4$  이상일 경우, 공통성(community)이  $\pm 0.4$  이상인 경우에 내적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측정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인적재량과 공통성 값이 0.4 이하인 문항은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5 이상인 항목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804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정부 역량	혁신성	.814	.692	.913
	효율성	.807	.708	
	신속성	.792	.695	
	공무원 역량	.769	.649	
	투명성	.750	.641	
	형평성	.773	.663	
	청렴성	.713	.610	
정부 지원 중요성	세금감면 혜택	.816	.692	.827
	전입지원금 중요	.737	.669	
	정부지원 중요	.793	.706	
	출산장려금 중요	.692	.578	
정책수단 확대 필요성	전입지원금 정책홍보 강화	.784	.692	.715
	전입지원금 규모 확대	.808	.675	
	출산장려금 정책홍보 강화	.638	.503	
정책수단 활용도 평가	경제적 규제 완화	.743	.598	.674
	사회적 규제 강화	.677	.568	
	세금감면 지원	.648	.527	
	구직활동 지원	.641	.534	
	전입지원금 지원	.640	.501	
흡입요인	교통망	.783	.630	.716
	문화시설	.781	.710	
	교육환경	.752	.654	
	일자리	.692	.559	
정책홍보 경험	출산장려금 정책홍보물 경험	.688	.556	.636
	전입지원금 정책홍보물 경험	.749	.652	
	인구늘리기 정책홍보물 경험	.721	.608	



### 3. 상관관계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부역량과 이사의향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흡입요인이 정(+)의 방향으로 이사의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책홍보 경험이 있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남성일수록 이사의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이사의향	정부역량	정부지원 중요성	정책수단 확대 필요성	정책수단 활용도 평가	흡입 요인
이사의향	1					
지방정부 역량	-0.073*	1				
정부지원 중요성	0.050	0.085	1			
정책수단 확대 필요성	0.147*	-0.047	0.412*	1		
정책수단 활용도 평가	0.061	0.274*	0.092	0.082	1	
흡입요인	0.338*	0.009	0.182*	0.187*	0.199*	1
정책홍보 경험	-0.016*	0.209*	0.004	0.087	0.375*	0.145*
남성	0.111*	0.104*	0.013	-0.002	-0.042	0.005
연령	0.089	-0.082	0.018	-0.051	0.015	-0.118*
미혼	-0.081	-0.016	0.057	0.052	-0.154*	-0.016
자녀수	0.093	-0.014	0.014	0.002	0.105*	0.058
소득수준	-0.062*	0.021	-0.282*	-0.206*	0.000	-0.143*
변수	정책홍보 경험	남성	연령	미혼	자녀수	소득수준
정책홍보 경험	1	1				
남성	0.021					
연령	0.073	0.185*	1			
미혼	-0.185*	0.018	-0.403*	1		
자녀수	0.164*	-0.018	0.462*	-0.655*	1	
소득수준	0.093	0.050	0.096	-0.222*	0.145*	1

\*p<0.05

### 4. 회귀분석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된 상황에서 정부역량과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모형 2부터 모형 5까지는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sup>6)</sup>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이사의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전체	미혼	기혼	기혼& 자녀 유	기혼& 자녀 무
지방정부 역량 평가	-.047*	.078	-.097*	-.116**	.145
정부지원 중요성	-.067	-.131	-.083	-.009	-.363**
정책수단 확대 필요성	.112**	.157	.174***	.191***	.186
정책수단 활용도 평가	.041	.176	-.042	-.023	-.128
정책홍보 경험	-.114**	-.124	-.144**	-.024**	-.267
흡입요인(희망 이동 지역)	.337***	.310***	.360***	.465***	.135*
남성	.108**	.089	.105*	.124**	-.025
연령	.081	.068	.020	-.066	.074
미혼	-.054				
자녀수	.013		-.006	-.147**	
소득수준	-.030	-.123*	.057	.123*	.071
경기/인천	.062	-.090	.231***	.128***	.489**
강원도	.011	-.167*	.163**	.037**	.180
충청도	.058	.042	.110	.061*	.441**
경상도	.011	-.140	.110	.041	.559***
전라도	.054	-.133	.232***	.037**	.698***
제주도	-.097*	-.519***	.120**	.064	.456**
Observations	387	110	277	239	38
F	7.57	3.73	5.71	6.47	1.95
R <sup>2</sup>	.246	.373	.247	.318	.570
Adj-R <sup>2</sup>	.214	.273	.204	.268	.278

\*p<0.1, \*\*p<0.05, \*\*\*p<0.01, beta 값: 표준화계수, 지역 준거집단: 서울

우선 첫 번째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 역량이 낮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수단의 활용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금이나 전입지원금, 그리고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정책홍보물을 본 적이 있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역량에 대한 평가와 정책홍보물에 대한 경험은 해당 지역에서의 배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 정책수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게 하는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사 가고 싶은 지역에서 흡입요인(pull factor)으로 작용하는 교통망, 문화시설, 교육, 일자리 등의 요인이 매력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이사의향이 높게

- 6) 회귀분석 이외에도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홍보 경험이 정책수단의 평가와 이사의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결혼 여부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연구의 의의가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이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제주도 지역주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미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2의 결과에서는 배출요인과 배출억제요인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고, 흡입요인만이 이사의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사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거주자에 비해 강원도와 제주도에 거주하는 국민의 이사의향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3에서는 정부역량에 대한 평가와 정책홍보 경험이 이사의향을 낮추는 배출억제 요인으로 나타났고, 정책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이사의향이 높게 나타나 정책수단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 2와 달리 정부역량에 대한 평가와 정책홍보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입요인은 여전히 이사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혼 응답자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사는 응답자에 비해 경기/인천 지역과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이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 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역량에 대한 평가와 정책홍보 경험이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이사의향을 낮추는 배출억제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희망 이동 지역의 매력적인 요건은 여전히 유의미한 흡입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정책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할수록 이사의향이 높아져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모형과 상이한 결과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사의향이 낮아진다는 것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사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 등의 문제로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사의향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사의향을 정(+)의 방향으로 높이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기혼자의 경우 61.37%가 300만원 미만에서 401-500만원 미만 사이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반면에 미혼자는 81.82%가 동일한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의 소득수준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탈(exit)과 항의(voice)를 통해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김서용, 2009; Sharp, 1984; Teske et al., 1993).

다섯 번째, 자녀가 없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 5에서는 정부지원의 중요성에 따른 인식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고, 흡입요인만이 이사의향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 4와 달리 정책홍보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러한 관심도가 정책홍보물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 여부에 따른 정책홍보 경험을 살펴보면, 미혼

7) 주택 소유 형태(월세, 전세, 자가)가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는 48.18%가 정책홍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는 64.98%가 정책홍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unig(1993)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징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실행이라는 행위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sup>8)</sup> 이는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이벤트 뉴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인지는 가능해지더라도, 실질적인 행위나 합당한 정책, 정책집행 등의 행위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은 이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높아져 이탈(exit)하지 않고 충성(loyalty)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김서용, 2009: 155) 연령이 낮을수록 이탈(exit)과 항의(voice)를 통해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Orbell & Uno, 1972). 그러나 모형 4를 제외한 전 모형에서 방향성은 정(+)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이 국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여성일수록 관심이 많고, 인식 수준도 높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국민청원 내용에서도 지원을 받는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와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전북 익산시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5월 11일 첫째 아이는 50만원(축하금 30만원, 축하용품 2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 아이는 500만원, 다섯째 아이는 1,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7월 이후 출생아들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의 의견이 시민 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익산시는 조례가 공포된 지난 2017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결론이 났다(메디컬 투데이, 2017년 5월 11일).<sup>10)</sup>

다음으로 스웨덴의 아동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스웨덴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 범위가 임신에서 출발하고, 출산과 출산 후 1년간 육아보육, 탁아소, 미취학 아동교육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네 단계로 구분

8) Grunig(1993)은 국민의 인식과 태도 변용(transformation of attitude)을 상징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symbolic communication)과 행위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behavioral communication)으로 분류하여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9)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확인한 결과, 전 모형에서 평균 VIF 값이 2.0 이하로 나타났다. 평균 VIF 값은 모형 1이 1.49, 모형 2가 1.40, 모형 3은 1.48, 모형 4가 1.53, 모형 5는 평균 VIF값이 1.8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별 요인의 VIF 값과 평균 VIF 값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메디컬투데이. 2017년 5월 11일. “익산시 출산정책 “형평성에 어긋나”…부모들 지적 잇따라”. 최성수 기자. <http://www.mtoday.co.kr/mtoday/index.html?no=285474>.

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임신 기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1차 진료소에 등록하여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을 거쳐 임신수당과 부모수당,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출산 이후 1년간 육아보육 과정에서 출산 후 480일 간 부모수당을 수령한다. 이는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고, 480일을 지나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로 탁아소 지원 단계에서는 자녀가 만 1세부터 5세에 해당할 때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넷째 자녀 이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미취학 아동교육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고, 오전반은 무료, 오후반은 부모의 수입 2%를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아동 및 보육 서비스는 단지 출산과 단기간의 양육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에 걸쳐 구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지 첫 달부터 16세까지 지급되는 스웨덴의 아동보조금의 경우에는 1948년부터 시행되어 출산율이 2.0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1970년대에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부모보험제의 강화는 480일 간의 유급 출산휴가와 6세 무료 교육과정 제공 등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이현주 외, 2018: 77). 특히 스웨덴은 여성을 '양육자'의 역할로 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공보육 정책을 우선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아의 경우에는 공보육 보다는 육아휴직 제도나 가족지원정책의 적용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도 스웨덴은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시 대체로 현물급여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택보조금이나 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및 구제하는 차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활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현주 외, 2018: 79).

Neya(2013)의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의 가족정책을 출생과 고용, 그리고 보육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개별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별 정책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사회시스템에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전광희, 2018: 22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스웨덴과 유럽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 고용기회의 보장과 공공보육시설의 충분한 공급 및 지원, 임금과 육아의 성역할 평등 등의 전제조건이 보장될 때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직장 보육시설의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장려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월 4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87.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여성이 88.7%, 남성이 8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70.5%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2015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2.5%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의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승진 및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17.2%, 돈을 벌어야 해서라는 응답이 15.7%로 나

타났다(연합뉴스, 2020년 1월 4일).<sup>11)</sup> 이러한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는 단순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정비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자가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협력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모형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 지역이 보유한 교육, 교통, 문화, 일자리 등의 인프라에 의한 흡입요인이 이사의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 일자리의 질, 주거, 건강, 노후대책 등 생애주기에 걸친 요인들을 개선하여 출산율 감소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이철희, 2019a: 70).

한편, 자녀가 있는 기혼자일 경우에는 정책수단의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이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정책수단 활용에 대한 정책홍보의 수준과 전입지원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미혼과 자녀가 없는 기혼을 대상으로 한 모형 2와 모형 5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정책수요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 방식에 대해 지역의 특성 보다는 결혼 여부나 경제활동, 소득 등의 개인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철희, 2019b: 88).

비수도권으로 주거이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비용이 원인일 수 있고, 수도권 가구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가소유를 높이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임미화, 2019: 130)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거나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통해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차별 없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혼외출산이 영국의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이삼식·최효진, 2014: 88). 위와 같은 가설검정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11) 연합뉴스. 2020년 1월 4일.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18400003?input=1195m>

〈표 9〉 가설검정결과

구분	가설 내용	검정결과		
		미혼	기혼&자녀 유	기혼&자녀 무
정부역량과 정책수단의 활용	가설 1-1.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낮을 것이다.	기각	채택	기각
	가설 1-2.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낮을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가설 1-3. 정책수단의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높을 것이다.	기각	채택	기각
흡입요인	가설 2-1. 이동하고 싶은 지역의 흡입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높을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정책홍보	가설 3-1.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홍보물을 경험한 국민일수록 이사의향이 낮을 것이다.	기각	채택	기각
정책홍보와 개인의 특성	가설 3-2.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물 경험 여부에 따른 이사의향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부분 채택	부분 채택	부분 채택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성인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의 이사의향을 낮추는 배출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정부의 역량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김태형 외, 2019: 25), 이러한 정부신뢰가 해당 지역주민이 현재 거주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질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결부시켜보면(김태형 외, 2018: 295),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지역 거주민의 거주 의사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목적과 자체 역량을 개발해나가야 할 목적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결혼 여부에 따라 이사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 대상에 따른 대안 마련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혼 응답자의 경우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의 활용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수록 이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 규모에 불만족할 경우 기혼인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신혼부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결혼장려금이나 출산장려금 등의 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책 대상자가 원하는 정주여건과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방정부가 타겟화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출산지원금 제도(Baby Bonus), 소득세 감면 제도, 의료비 지원 및 주택보조금 제도 등 재원형 정책수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펼친 것에 비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즉, 기혼여성의 고용이 어려운 현실과 가사 및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는 가정 내 역할 및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나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김상호, 2016: 2-3).

셋째, 자녀가 없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이사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보다 다각적으로 강도 높게 이뤄지는 곳으로 이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부부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방안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자녀가 있는 기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정책홍보 경험이 이사의향을 낮추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나 미혼 응답자의 경우에는 정책홍보 경험이 이사의향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과 비교했을 때, 출산장려금과 전입지원금,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정책홍보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지시킴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전출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정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거나, 해당 채널에 정책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책홍보 방안의 다각화와 홍보 채널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이 국민의 인식조사에 따라 이사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거주지역과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분석에 담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떠한 요인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와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의 어떠한 요인이 흡입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출퇴근 유형이나 일하는 곳의 위치에 따른 주요 요인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많이 논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집중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는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배출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재 거주지의 장점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네 번째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표본수가 성별, 결혼유무,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어떠한 요인이 배출요인 또는 배출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와 흡입요인으로 작동하여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만큼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효과성을 동시에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속 연구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나 사회적 자본 요인 등이 배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문조사와 분석 부분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정주하게 하는 요인과 동시에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환경적 요인 이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측면에 해당하는지, 인접지역 간의 경쟁에서 어떠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이 이사의향에 보다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상철. (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 김경수·임하경. (2011). 동남권의 도시규모별 지역간 주거이동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6(3): 37-46.
- 김광식·박현신. (2007).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 및 종사자의 순위. 「국토계획」, 42(7): 7-24.
- 김동수·장재홍·이두희. (2009).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 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 김리영·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19.
- 김상호. (2016).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역사와 최근 이슈. 「Global Social Policy Brief」, 5: 1-5.
- 김서용. (2009).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Tiebout 가설과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145-169.
- 김성태·장정호. (1997). 한국 지역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1970-1991. 「국제경제연구」, 3(2): 175-197.
- 김정숙·최선미. (2019).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1): 185-220.
- 김태형·김한빛·문명재. (2019).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6(2): 1-36.
- 김태형·최정인·정세희·문명재. (2018).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1): 281-306.
- 김한나. (2012). 사회복지기관 SNS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이용 동기가 홍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마상진·박대식·안석·황정임·남기천. (2018).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문소영. (2018).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문태훈. (2011). 인구감소형 도시의 주택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2(2): 127-151.

- 박대식·마상진·황정임·김경인. (2018). 「귀농·귀촌정책 진단 및 성과 평가 보고서」. 전남: 한국통촌경제연구원.
- 서규선·박덕병. (1998).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6: 443-457.
- 서라벌·성욱준. (2019).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이 이주 의향에 미친 영향 연구 -경기도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199-223.
- 석호원. (2012). 고령집단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273-312.
- 손용비·장재민. (2018). 통근자의 가구 및 교통 특성과 이사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연구」, 28(2): 35-47.
- 손호중. (2007). 행정PR 형태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분석: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97-126.
- 송태민. (2016).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분석. 「통계연구」, 특별호: 72-95.
- 송헌재·김현아. (2014).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응용경제」, 16(3): 165-199.
- 신윤창·안치순. (2009).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189-211.
- 신호창·홍주현. (2000). 정책에 대한 지식 및 오해와 태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 본 공중 세분화 캠페인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2호: 169-185.
- 양미선. (2019). 지역 저출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29-41.
- 오영희·조남훈·김경래·유혜영. (2006). 「저출산 대응 홍보교육전략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순덕·강경하·박광주·이정화.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 139-153.
- 윤순덕·최정신·마상진·남기천. (2017). 귀농귀촌패널로 본 역귀농귀촌실태. 「농촌사회」, 27(1): 59-93.
- 이기배. (2013). 수도권 정책 및 입지규제에 대한 지역 간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409-430.
- 이삼식·최효진. (2014). 영국의 인구 변동과 정책 동향. 「보건복지포럼」, 78-88.
- 이연경. (2018).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52(2): 301-335.
- 이재중. (2002). 수도권 인구이동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희. (2019a).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 25(1): 37-91.
- \_\_\_\_\_. (2019b). 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83-89.
- 이현주·김진·John Hudson·Stefan Kühner·전지현. (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국토연구원.
- 이희찬. (2009).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모형 분석: 정착자금 지원효과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5(2): 97-110.

- 이희찬·김현. (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3(2):127-149.
- 임미화. (2019). 수도권가구의 비수도권으로 주거이동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7(2): 117-13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 전광희. (2018).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29(1): 219-237.
- 정성호. (2008).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과 특성. 「한국인구학」, 31(2): 133-155.
- 정재은·박천규. (2015). 자녀나이가 교육목적 주거이동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연구」, 25(2): 35-44.
- 정혜선. (2001). 사회복지기관·시설의 PR전략과 과제연구. 「사회복지시설연구」.
- 진장익·진은애·이우중. (2013). 도시스프롤이 통근통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48(5): 269-283.
- 최분희. (2015).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연구: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성락. (2012). 한국 기초 지자체 인구 이동에서의 티부 가설 검증. 「한국공공관리학보」, 26(4): 139-157.
- 최은영·구동희·조순기. (201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I): 이동 가구 특성과 선택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123-136.
- 최지현·조삼섭. (2014).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인식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홍보학연구」, 18(2): 45-84.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 홍성효·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7). 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1): 223-254.
- Bello, D. C. & Etzel, M. J. (1985). The Role of Novelty in the Pleasure Travel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4(1): 20-28.
- Gelders, D., & Ihlen, Ø. (2010). Government communication about potential policies: Public relations, propaganda or both?. *Public Relations Review*, 36(1): 59-62.
- Grunig, J. E. (1993). Image and substance: From symbolic to behavioral relationships. *Public Relations Review*, 19(2): 121-139.
- Grunig, J. & Hunt, T. (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NY: Holt Rinehart & Winston.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Vol.2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wlett, M., & Ramesh, M. (2003).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Styles. Howlett M, Ramesh M.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Ontario, 185-206.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 47(2): 363-391.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31-466.
- Neya, G. (2013). Welfare States,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Europe. *Demography of Europe*. New York: Springer. pp. 29-53.
- Orbell, J. M., & Uno, T. (1972). A theory of neighborhood problem solving: Political action vs. residential mobi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71-489.
- Owen, D. & Green, A. (1992). Migration Patterns and Trends. In T. Champion & T. Fielding, *Migration Processes and Patterns*, 1: 17-40. London: Belhaven.
- Roseman, C. C. (1981).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Midwest*. NCRC, Iowa State University.
- Sharp, E. B. (1984). "Exit, Voice, and Loyalty" in the Context of Local Government Problem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1): 67-83.
- Smith, L.J.S. (1983). *Recreational Geography*. London: Longman Inc.
- Teske, P., Schneider, M., Mintrom, M., & Best, S. (1993). Establishing the micro foundations of a macro theory: Information, movers, and the competitive local market for public good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702-713.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Weiss, J. A. & Tschirhart, M. (1994).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as Policy Instrumen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1): 82-119.
- Withey, M. J., & Cooper, W. H. (1989). Predicting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21-539.
- World Bank. (2015). *World Development Report 2015: Mind, Society, and Behavior*. Washington, DC: World Bank.

김태형(金泰亨):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20)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초청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부의 내부 관리역량과 외부 관리역량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2021),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직 목표제 도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2021), "공공조직 내에서의 조직정치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침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연구관심분야는 조직/인사, 공공관리, 지방정부, 성과 등이다.(taehyung@kipa.re.kr)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and Policy Tools on the Intention to Move

Kim, Taehyung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local governments' capacity and policy tools affect the people's willingness to move in order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ett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local governments striving from various angles to population inflow. In previous studies, economic and transportation factors have been discussed as the most powerful factors influencing director intentions. However, at a time when local governments are devising various policy tools for population inflow, such as local extinction, and competitively attempting to increase the population through cash expenditure,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capacity and policy tools local governments can lower their willingness to move.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different results were derived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ildren, whether they were single or marri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intention to move is lowered when the people who perceiv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high capacity are married or when they have children while married.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ull factor of the area you want to move to increased the people's intention to mov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eople who experienced promotional materials for population policy in the area where they live showed lower intention to move. In particular, married or married with childre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suggesting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promote policies and utilize policy meas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recipients.

Key Words: Local Government Capacity, Policy Tools, Intention to Move, Population, Policy PR

